

첨 부

'25년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세부 추진상황

【'25.12.31. 기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결과	소관부서	진행경과
1	제116회 (1.6.)	2025년 해양경찰 교육훈련계획(안)	계획	• 4대전략*,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 *△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등) △ 실전형.핵심인재 양성(글로벌 인재양성, 맞춤형 교육 강화 등) △ 통합적 교육훈련 체계 마련(교육훈련 제도정비, 훈련체계 고도화 등) △ 협력 네트워크 구축(관·학 상생기반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실	25.1.10. 시행
2		2025년 선박교통관제(VTS) 시행계획(안)	계획	• 5대전략*, 17개 실천 과제 수립 *△ 광역·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동해·포항권 광역VTS 구축 등) △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빅데이터 및 AI 기술 현장 도입 등) △ 선박교통관제 인적 역량 강화(신임경찰 대상 VTS 교육 확대 등) △ 제도개선,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규정집 제작, 국제기구 인력파견 등) △ 선진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마련(관제과 분과 및 관제국 신설 등)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5.1.14. 시행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령	•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의 '보험가입관리 전산망' 규정 시행일('25.6.11.)에 맞춰 하위규정 마련 • 시행령: 수중레저활동자에 한하여 구명조끼대신 잠수복 착용 가능토록 개선 • 시행령: 수상레저기구 속도 제한구역에 방파제추가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25.6.2. 공포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 시행규칙: 조종면허 필기·실기시험의 접수·변경을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수정사항 가입관리전산망 이용이 곤란한 경우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5.6.9. 공포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5	제117회 (1.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훈령	• 「경찰공무원법」 개정('24.8.14.)에 따라 변경된 용어 정비 ※ (기존) 간부후보생 → (변경)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속진형 경위임용제' 도입에 따른 교육체계 근거 마련	원안 의결	교육 훈련 담당관실	25.2.4. 시행
6	제118회 (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령	• '25년 정기직제 및 '24년 하반기 수시직제 배정 계획에 따라 '25년 1분기에 필요한 기구· 인력을 반영 ※ (주요내용) △강릉서 신설 (기구 +1서) △ 함정 도입 및 광역VTS 구축 (인력 +62명) △ 마약수사 강화 (인력 +3명) △ 파출소 경장경사를 경위로 직급 상향 (+34명)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5.2.25. 시행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5.2.25. 시행
8		2025년 수난대비집행계획	계획	• 5대 전략*, 20개 실천 과제 수립 *△ 조직·인적 역량 고도화(긴급구조지원 체계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 현장중심 대비체계 구축 (현장대응 가이드 정비, 합동훈련 내실화 등)△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해양재난구조대 조기안 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수색구조 인 프라 구축(자율무인잠수정 등 R&D 지속 등) △ 국제 수색구조 협력 확대(인태전략 주요국 수색구조 협력망 확대 등)	원안 의결	수색 구조과	25.2.1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9	제118회 (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령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무동력수상 레저기구 운전자* 및 보험·공제회사** 대상 과태료 근거 마련 * 주취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험회사가 해양경찰청 등 기관에 보험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미통지 1건당 1만원 과태료 부과 (100만원 한도)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25.6.2. 공포
10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계획	• 4대 분야*, 13개 주요 R&D사업 추진 * △ 선제적 해양경비체계 구축(차세대 디지털VTS 서비스 및 장비개발 등) △ 현장중심 대응 기술·장비 개발(군집수색 자율 수중로봇 시스템 등) △ 新 방제 기술 개발(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 등) △ 맞춤형 첨단장비 개발 및 고도화(AI기반 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 등)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25.2.10. 시행
11	제120회 (2.17.)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훈령	• 해양오염방제국 계 단위 부서 신설(+3계*) * 대외협력계, 방제지원계, 지도점검계 • 해상교통관제과 계단위 부서 통합 ※ (폐지)관제기술개발계, (변경)관제교육훈련계→관제협력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조정 ※ 해양경찰 관현악단 → 해양경찰악대로 용어 수정 등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2.25. 시행
12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 항공, 관제, 안전 분야 사무 조정 사항 반영 ※ (신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사무 등 <u>수정사항</u> 제4조, 제4조의2 조문은 전결과 위임이 모두 포함된 사항이므로 조문 제목에 위임을 추가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2.25.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13	제120회 (2.1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훈령	- 일선서 형사계(부산서: 22명)의 적정 통솔범위 유지를 위해 분계(형사3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존)수사계, 형사계, 형사2계(형기정) → (개선)수사계, 형사1·3계, 형사2계(형기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2.25. 시행
14	제121회 (3.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선박교통관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추진 △ 운항자 교육방법 다양화, 관제 신고의무 위임규정 정비 △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교통관제 요청절차 마련 △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 수립시기 변경(매년→5년) 수정사항 항행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함 *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	수정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5.6.21. 공포
1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선박교통관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추진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명확화(자격요건 중 무선 종사자 추가) △ 영해 밖 관제수역 제공정보 종류 신설 (해상공사·해상훈련 등) △ 국제기준에 따른 선박교통 관제사 교육과정 정비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5.6.21. 공포
16		제3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안)	계 획	4대 추진 전략*, 10개 추진 과제 수립 △ 첨단기술과 협력기반 연안안전 공간 조성(미래형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국민·지역과 함께하는 연안 안전 관리(협업, 지킴이 운영 확대 등) △ DEI와 트렌드를 반영한 연안안전 문화 확산(교육 확대 및 홍보 등) △ 연안안전 제도 개선(체험활동 신고, 교육 개선 및 제도 정비 등)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5.3.4.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17	제121회 (3.4.)	2025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안)	계획	- 제3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25~'29)을 구체화하는 연간 실천계획* 수립 △ 시기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표준화 추진 △ 기관 협업 생존수영·안전교육 확대 및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체험활동 신고절차 개선 및 통제장소 무단출입 규제 강화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5.3.4. 시행
18	제122회 (3.17.)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 실종자 수색 등 수색활동 장기화 시 구조본부 비상가동 종료*에 대한 절차 규정 신설* 해양 수색구조기술위원에서 생존가능성 등 고려 심의를 거쳐 종료 <u>수정사항</u> 어색한 관용구, 한문 투 표현 수정 등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25.3.31. 시행
19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전문정보관 자격요건*과 재인증 기간**을 개선·보완하여 전문정보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원안 의결	정보과	25.4.7. 시행
20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 (기존) 최근 5년간 정보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 (개선) 정보부서 근무자 또는 정보부서 경력자 **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여 재인증 부담 감경	원안 의결	정보과	25.4.7. 시행
21		「(해양경찰청) 채증활동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 채증 인권 보호 강화(채증사실 고지규정 신설) 및 실효적 채증을 위한 채증반 편성을 재량사항으로 변경 <u>재상정 사유</u> 경찰청(육상)과 해경청(해상)의 차이점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목적·정의·채증의 범위 등 조문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재상정 의결	정보과	25.6.16. 재상정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22	제123회 (4.7.)	「해양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예규	- 고소·고발 등 수사 관련 민원은 수사과에서 직접 접수하도록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일반민원 → 민원실 고소·고발 등 수사 관련 민원 → 수사과 <u>수정사항</u> ① 민원조정위원회 조문 정비(의결 정족수, 간사규정 신설) ② 제명 변경(「해양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등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5.4.15. 시행
23		‘25년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	계획	5대 추진 전략*, 16개 추진 과제 수립* △ (건강복지) 해경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직무복지)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가족·문화) 일과 여가, 가족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구현 △ (미래설계)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소통·공감)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25.4.8. 시행
24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예규	·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제도 연구용역(‘24년)’ 결과를 반영, 합리적인 방제비용 징수를 위해 산정 기준* 및 품목단가 개정** * 국제기준 도입 및 멸실기계·기구, 인건비 등 현실에 맞게 개선 ** 신규 도입·불용장비 재정비 및 요율 현실화 <u>수정사항</u>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대체 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규정 추가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25.4.16.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25	제123회 (4.7.)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예규	국가의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민간위탁금 적용 범위 확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선 <u>수정사항</u> 약칭 대상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문장의 위치 조정 ※ (기존) 공단,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 (변경)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25.4.16. 시행
26	제124회 (4.21.)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시행(‘24.8.14.)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소속기관장에 대한 회피·기피 근거 신설 등 <u>수정사항</u> 태일적 의미를 갖도록 용어 수정(및→또는) (예시)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자 또는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자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실	25.4.30. 시행
27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식사비 가액 상향(3→5만원) 등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실	25.4.30. 시행
28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예규	최근 사회문제화된 비위 유형(마약·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등	원안 의결	감찰담당관실	25.4.30.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29	제124회 (4.21.)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예규	· '주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문서화와 관리 강화를 위해 '주의장' 제도 신설	원안 의결	감찰담당관실	25.4.30. 시행
30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기준 정립 ※ (주요내용) △ 제안업무 대상 및 관장 △ 제안 채택심사 △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창 안등급 결정 등 <u>수정사항</u> 제안의 접수기간 외 접수방법도 함께 명시 <u>수정사항</u> 민간위원 위촉 시 전문 분야 수정 (기존) 제안이나 해양경찰 분야 → (수정) 해양경찰 분야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5.1. 시행
31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만족도 조사 업무 확대에 따른 규칙 재정비 및 국민패널 운영 조항 신설 <u>수정사항</u> 정의된 용어(국민만족도조사센터)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약칭(센터)한 조문을 수정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5.1. 시행
32	제125회 (5.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 ① 정비창 직제(정원 131명) 반영 ② 총액인 건비제 변경(미래전략·감찰팀 폐지) ③ 교육원 조직개편(교무·교수와 통합) 등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7.1. 공포
33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훈령	· 미래전략·감찰 폐지, 기획재정·감사로 사무 이관 · 경비작전과, 해양안전과 사무조정 및 명칭 변경 등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5.14. 시행
34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 사무분장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결재권 조정 등 <u>수정사항</u> 수상레저과 소관 신설 사무(과장 전결) 내용을 '안전기준 수립'에서 '안전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5.14.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3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규정」	대령	- 공무상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 △ 「재해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 추서 조문 통일 △ 긴급한 경우 先 특별승진 임용 후 심사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신설 등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5.7.8. 공포
36	제125회 (5.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규정 시행규칙」	부령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특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u>수정사항</u>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 명확화 ※ (기존) 사고가 있을 때 ⇒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실	25.7.8. 공포
37	제126회 (5.19.)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훈령	- 우수항공대 선발을 위한 평가·선발 규정 신설 -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및 기술유지 기준 마련 - 탄력적 상황 대응을 위한 출동 항공대 기준 정립 - 탑승자 보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 개정 (항공보안법 준용) <u>수정사항</u>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절 - 항공기 특수성을 반영한 심의가 되도록 항공 업무 관련 전문가 중 위촉하도록 규정 신설 <u>수정사항</u> 주류를 정의하기 위한 근거 법령 오류 수정 - 「주세법 시행령」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1호 ⇒ 「주세법」제2조(정의) 제1호	수정 의결	항공과	25.6.2.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38	제127회 (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22.)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사전모집 금지 조항 삭제 및 연안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부 권한 위임 규정(소속기관장) 신설 등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5.9.2. 공포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 체험활동 신고서 제출 기한 변경 및 연안안전교육·홍보의 대상·방법·신청 절차 등 규정 수정사항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제7조제6항), 일괄 규정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25.10.17 공포
40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예규	• 전문가 자문회의 근거 신설 및 소요예산 검토 절차 보완 • 장비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개선△위원장 지정 방식 변경 (청장지정→위원 중 호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비 제안 발표방식 변경 ※ (기존) 대면 발표 ⇒ (변경) 비대면 발표 수정사항 ‘전문가자문회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대면’ 방식 발표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25.6.11. 시행
41	제128회 (6.16.)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MDA 및 위성센터 구축 등 핵심 업무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미래경비기획과의 존속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6월 29일 까지 → (개정) 2025년 12월 28일까지 수정사항 미래경비기획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예시) 무인체계 도입 ⇒ 해양무인체계 도입 등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6.29.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42	제128회 (6.16.)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훈령	• 용도폐지된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 - (주요내용) △ 목적·용어 정의 등 명확화 △ 업무수행·절차 △ 부서별 업무 분장 △ 해외양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정사항 현장실사 시점을 업무절차에 따라 '양도약정서 체결 전'에 실시하도록 명시	수정 의결	국제협력담당관실	25.7.1. 시행
4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규정」	고시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25.6.21.)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주요내용) △ 항행·정박·계류 신고 절차·내용 및 방법 구체화 △ 관제구역 확대 △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신고의무 신설 △ 신안구역 관제채널 변경(Ch.69→Ch.13)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5.6.21. 시행
44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선박교통관제사' 인용 조항 및 명칭 변경 ※ (기존)교육훈련계,국제항로표지협회 →(개정)관제협력계,국제항로표지기구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5.6.21. 시행
45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훈령	•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분리 운영' 및 '관제통신 녹음 보존에 필요한 사항' 인용 조항 변경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5.6.2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46	제128회 (6.16.)	「(해양경찰청) 채증활동규칙」	훈령	- 채증활동의 법적 근거와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와 업무 효율성 강화 △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으로 규칙명 개정 △ 채증반 편성을 상황과 실정에 맞게 재량으로 변경 △ 인권 보호를 위한 채증사실 고지 규정 신설 △ 채증활동 범위 설정(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u>수정사항</u> 채증사실 재고지 시점을 채증사실 최초 고지 후 '1시간 경과 시점'로 명확히 규정 <u>수정사항</u> 채증자료 보존시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보완	수정 의결	정보과	25.7.7. 시행
47	제129회 (7.7.)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령	「해양경비법」 개정('25.4.22.)에 따른 해양경비정 보의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마련	원안 의결	미래경비기획과	25.10.23. 시행
48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훈령	수사경찰 자격을 4단계(예비·일반·선임·책임수사관) 구분 및 단계별 자격 선발방법·운영 근거 신설 <u>수정사항</u> 법령안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신설 조문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체계의 통일성 확보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25.7.14. 시행
49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훈령	· '전문수사관 마스터 자격 기준 완화(근무경력 10년→8년) · 인증심사 제한규정 신설(지원자징계·비위 이력 확인 등)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25.7.14.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50	제129회 (7.7.)	「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예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으로 규칙명 개정 - 수사장비 분류체계 재정립 및 안전수칙 신설 [수정사항] 수사장비 관리 주체(관리책임자) 및 수 사장비관리시스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장비(수갑 등)를 명시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25.7.14. 시행
51	제130회 (7.21.)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수리기한 연기 관련 전자적 신고 방법 도입 및 관리 시스템 변경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5.9.15. 발령
52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 (‘24.7.17.)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 변경(해경→ 행안부)되어 행정규칙 폐지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5.9.15. 발령
53	제131회 (8.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령	「수상구조법」 개정·시행(‘25.12.21.)에 따라 수상구조사 등급별(지도사·1급·2급) 자격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등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25.12.16. 공포
5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25.12.19. 공포
55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부령	「재난안전법」 개정·시행(‘25.10.2.)에 따라 해양 재난 시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25.10.2. 시행
5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령	「수상구조법」 개정·시행(‘25.12.21.)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수상구조사 통합* 및 민간자격증 특례 부여 * (기존)인명구조요원(민간), 수상구조사(국가) → (개정) 수상구조사 [수정사항] 민간자격 특례 인정 관련 문구를 법령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5.12.16. 공포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57	제131회 (8.4.)	「해양경찰수사규칙」	부령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시행 (25.10.10.)에 따라 수사서류 전자화 등 전자적 수사업무 처리 방식 규정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25.10.10. 시행
58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예규	• 외사장비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취득보관·사용·처분 절차 및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수정사항] 외사장비의 기능·사용목적·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장비구분 목적을 강화	수정 의결	외사과	25.8.11. 시행
59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훈령	• 「방첩업무규정」 개정(24.4.23.)에 따라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 개정 [수정사항] 규정에서 '소속기관'이 일관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어 법령 체계 정합성을 위해 용어 수정	수정 의결	외사과	25.8.11. 시행
60	제132회 (8.18.)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정보공개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 투명성 제고 [수정사항] 심의회 개최 사유에 따라 운영부서와 처리부서 간 경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 [수정사항]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5.9.2. 시행
6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령	• 25년 정기직제 3분기 인력 반영(총 4명, 중 형함정 증톤대체) • 총 3개 분야(중부청 부장, 본청 보안과, 지방청·경찰서 정보외사과) 신설기구 평가대상 제외 결과반영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5.9.23. 공포
6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 '해양치안빅데이터팀' →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명칭 변경·운영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5.9.23. 공포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63	제132회 (8.18.)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훈령	• '인공지능전환팀' 하위 2개 계 신설(인공지능전략, 인공지능데이터운영), 관련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9.23. 시행
64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 '인공지능전환팀' 업무반영하여 위임전결사무 수정 • 감찰팀폐지('25.7.1.)에 따른 위임전결 사무 이관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9.23. 시행
65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고시	• 위험·유해물질(HNS) 물동량·위험성·유해성 평가를 반영해 고시물질 재지정 (기존 64종→개정 84종)	원안 의결	기동방제과	25.9.1. 시행
66	제133회 (9.8.)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훈령	•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시행('25.10.10.)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자적 처리 기준 신설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25.10.10. 시행
67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훈령	• 휴대용 무선통신망 신설 및 관리 방안 마련 • 통신망운용채널정비(별표2·3) 및 용어 정비 (음어자재 → 암호자재)	원안 의결	정보통신과	25.9.16. 시행
68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훈령	• 정보화사업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 • 정보시스템운영실태조사및통폐합 등 관리 제도화 [수정사항] 정보화업무 사업부서와 운영부서 임무를 명확히 구분	수정 의결	정보통신과	25.9.16. 시행
69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훈령	• 저장매체 불용·폐기 기준 및 비인가 기기 반입 ·사용 기준 신설 • 경미한 위규처리 기준 마련 및 정보시스템 현황 제출 의무화	원안 의결	정보통신과	25.9.16.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70	제133회 (9.8.)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통합* 및 관제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 목포광역VTS에 진도연안VTS가 통합되어 지정해제 ** 연안VTS를 광역VTS로 변경(목포항·군산항·제주항)	원안 의결	정보통신과	25.9.16. 시행
71	제134회 (9.22.)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상위법(경직법)과 중복된 심의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상위법으로 일원화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10.31. 시행
7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 시험집행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 <u>수정사항</u> 채용단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성검사 시행 시기(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실시)를 명시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실	26.2월 시행 예정
7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 면접 평가요소 세분화* 및 합격자 결정기준 정비** * (기존) 2개 요소→ (개정) 해양경찰 인재상에 맞춘 5개 요소 ** 과반수 위원이 동일 평가요소 2점 이하 채점 시 불합격 - 인사처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배점항목에서 가산점 제외 등	원안 의결	교육 훈련 담당관실	26.2월 시행 예정
7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예규	- 면접시험의 각 단계별 면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개선 - 신체검사서 기준일을 서식에 맞게 정비* * 판정일로부터 4개월 <u>수정사항</u> '판정일'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완적 표현 추가(판정일⇒검진기관의 판정일)	수정 의결	교육 훈련 담당관실	26.2월 시행 예정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75	제134회 (9.2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예규	• 승진시험 응시자 입·퇴장 규정 현행화 -시험시간 중 시간 중 퇴장 시 재입장 불가 • 선택형 필기시험 채점방식의 전산 자동처리 원칙 명확화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실	25.11.21. 시행
7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내부 공문으로 시행하던 '상시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효율적 운영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칙으로 제정 수정사항 부서육성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찰관만 평가대상이 되도록 수정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실	25.11.1. 시행
7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정보보호체계와 책임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제정 ※ (주요내용) △ 정보보호책임관 및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범위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사항 등 수정사항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관련 일부 조문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표현을 제거하여 조문 체계 정비	수정 의결	정보통신과	25.10.21. 시행
78	제135회 (10.20.)	「해양경찰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3개 분과(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재정성과평가) 운영 근거 명시 • 수당 지급대상 중 공무원인 위원 제외 규정 신설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10.3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79	제135회 (10.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시, 개정된「임용규정」의 비율에 맞게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의 평정점 산정 방식을 개정 * (기존) 70점 : 근무평정 50 × 1.4 → (개정) 80점 : 근무평정 50 × 1.6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5.10.31. 공포
80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훈령	•해양환경 정책·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체계 개편 △ 신유형물질 및 미래재난 대비 분야 및 위원 해촉 근거 신설 △ 위원장·분과위원장 직위 신설 및 임기 근거 마련 등	원안 의결	방제기획과	25.10.31. 시행
81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훈령	• 해경서 간 방제함정 필수 인원 지정 편차, 순환 전보제한으로 인한 인사 형평성 문제(역량개발, 승진 등) 등 제도 개선 △ 필요 시 방제함정 근무기간 연장 규정 마련 △ 톤급별 필수 운항요원의 지정 인원 기준 신설 △ 필수요원 순환전보 허용 등 수정사항 소형방제정의 결과 보고 서식을 일원화 수정사항 방제함정 승조원 보직기준 보완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25.10.3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82	제135회 (10.20.)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훈령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설치되는 방제대책 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본부 구성 등 개정 △ 각급 본부와 임무를 구분, 동시 설치·운영 가능 △ 현장 지휘 권한 원칙적 해경서장 부여 △ 각급 본부 운영기관에 대책본부 설치 등 수정사항 약칭인 본부장이 하급 방제대책본부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약칭 위치를 이동 (제5조의2⇒제5조)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25.10.31. 시행
83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부령	「해양경비법」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명령 방법 부재, 하위법령에 정선 요구 방법 신설 -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정선 요구 방식(신호기, 음향 신호 등) 및 무선통신, 항공기를 이용한 정선 요구 방법 수정사항 정선요구 수신 주체 수정(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 ⇒ 선장 등 운항자)	수정 의결	경비작전과	규제 심사
84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고시	국가기반시설의 설립·폐쇄 또는 명칭·주소 변경에 따라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 (기존) 149개소 → (개정) 155개소(신설 17, 변경 56, 해제 11)	원안 의결	경비작전과	25.11.25.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85	제135회 (10.20.)	「함정 운영관리 규칙」	훈령	- 표준일과표 개선(표준일과 시간 조정* 및 예외 기준** 명확화) * (기존) 4.5H → (개정) 3H, ** 기상특보, 2시간 이상 상황 대응 등 - 기장예절, 함정예절 신설, 국기게양 개선 및 소형 특수기동정(SS정)함정 분류 추가 [수정사항] 경비함정 국기게양·경례 관련 2개 조항을 별개의 장으로 신설·이동	원안 의결	경비작전과	25.11.25. 시행
86		「해양경찰 경비규칙」	훈령	비공개 행정규칙(3급 비밀)	재상정 의결	경비작전과	25.12.15. 재상정
87		「해양경찰수사규칙」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시행('25.10.1.)에 따라 '환경부장관' 용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25.10.31. 시행
88	제136회 (11.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ICAO 평가 대비 전문가 자문 권고사항에 따라 감독관 운영 및 감독활동에 대한 체계를 재정립 △ 시정조치 유형 및 기한 4가지 구분 △ 감독관 교육 과정 재설정 및 평가 기준 신설 △ ICAO 부속서 12(수색·구조) 이행 근거 마련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25.11.10. 시행
8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이수해야 하는 「수상 안전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과목 추가 [수정사항]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과정에도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과목을 추가하도록 수정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입법예고 (~26.1.6)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90	제136회 (1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조종면허 대행기관 신규 지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심사위원회 기능에 '공모에 관한 사항' 신설 수정사항 조문 구조와 중복 표현에 대한 체계적 정비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5.12.1. 시행
91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	국제적 인권 기준 향상 및 유치·호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치인 보호와 인권보장 강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유치인 보호관 배치 자격 제한 △ 유치인 질병 시 관련 법령안내 △ 유치장 동시 접견 인원 규정 △ 영상통화접견 신설 등	원안 의결	수사심사과	25.11.17. 시행
92	제137회 (11.17.)	제2차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계획	R&D 투자방향,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 수립 * (전략1) 해양 임무 수행 첨단화를 위한 혁신 기술 투자 확대 (전략2) 해양경찰 맞춤형 R&D 전주기 전략성 강화 (전략3)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전략4) 기술-현장 연결 Bridge 인력·인프라 육성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25.12.29.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93	제137회 (11.17.)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예규	- 정비창 시공처에 대한 수리구분 및 수리대상 확대 변경[별표2] - 연안구조장비를 '연안구조보트'로 용어 정리 - 크레인 안전검사에 대한 검사장비,기준 및 방법 등 명확화 수정사항 정비창 상가수리 대상을 항목별 구분이 쉽도록 수정하고, 외주수리 대상도 여건에 따라 정비창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25.12..5. 시행
94		「함정 먹는 물 관리 규칙」	예규	함정 먹는물 정수기(함·정장) 및 저장탱크(기관장) 관리책임자 임무 구분, 저장탱크 수리 근거 마련 등 수정사항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 보고 대상에 서특단·교육원·중특단 소속 함·정장을 추가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25.12..5. 시행
95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훈령	- 훈련교관 특수복식 신규 추가 및 개선 해상 진압복 제식 반영 - 경찰관 체력단련복(하계·동계) 신규 반영 및 라운드티 삭제 등	원안 의결	장비관리과	25.12..5. 시행
96	제138회 (12.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일괄 개정	훈령	「정부조직법」개정('25.10.1.)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 반영*행정규칙 387개 중 4개(훈령2, 예규1, 고시1) 일괄 정비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5.12.10. 시행
9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령	'25년 수시직제* 및 신규인력평가** 반영 * 1대(제주 특수구조대) 47명(강릉서 구조대·상황실 인력 등) ** 총 2개 분야 145명(경찰서 구조대 112명, 상황실 33명)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98	제138회 (1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 '25년 총액인건비제 변경 • 분장 사무조정* 및 총액기구 명칭 변경** * 수사심사과 / **정책연구팀 → 해안치안과학정책팀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99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훈령	• 수사심사수상레저수색구조과 부서 내 사무 조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100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 (종합상황실)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사무 수정 • (수색구조과)수색구조 소관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신설 • (미래전략)미래전략추진팀 폐지 및 기획재정 담당관으로사무이관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10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훈령	• 지방청*·경찰서 '계 단위' 조직 설치 기준 개정 *기존상황기획·상황관리팀 → 개정상황총괄·상황관리계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10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업무처리 주체 변경*, * 기존해양경찰청장 → 개정시험관리기관의 장 •시험절차·방법 구체화* *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제출 등 <u>수정사항</u>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접수기관을 업무절차에 맞도록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25.12.2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103	제138회 (12.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자격시험 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지정'하고 자격시험의 실시 등 위탁 업무 내용 규정 - 수정사항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앞에 법인 설립근거(「수상구조법」 제26조)를 명시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26.1.1. 시행
10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령	국조실 규제심사 검토 결과에 따라 해양경찰 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수요원 자격요건 완화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입법예고 (~26.1.30)
105	제139회 (12.15.)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훈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 규정 전반 재정비△ 조문체계 정비 및 용어 순화 △ 특수기록관의 인력구성 및 주요 업무 등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6.1월 중 시행
106		「해양경찰 예절 규칙」	훈령	- 법제처 의견과 사회적 정서 등을 반영해 「해양경찰 예절 규칙」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관리* *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해양경찰 의식 규칙」, 「해양경찰 의전 지침서」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26.1월 중 시행
107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 및 인원 조정** * 기존 '25.1.1.~'25.12.31. → 변경 '26.1.1.~'26.12.31. ** '25년 412명→'26년 691명, +279명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26.1.1. 시행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 경과
108	제139회 (12.15.)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기존 '미래경비기획과' 폐지, 국정과제 경비 정보시스템 구축(MDA) 등 업무 추진을 위해 '해양영역인식과' 신설 - 존속기한 : '25.12.29.~'26.6.28.(6개월) / 임시정원 : 7명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5.12.29. 시행
109		제2차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계획	•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5년 단위 제2차 ('26년 ~ '30년) 기본계획(3대 추진 전략*, 12개 세부 과제) 수립 *①AI 기반 선박교통관제(VTS) 고도화 ②빅데이터 기반 VTS 확대 및 현대화 ③고품질 VTS 체계 구축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5.12.22. 시행
110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계획	• 제3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25~'29)을 구체화하는 연간 실천계획(4대 추진 전략*, 16개 세부 과제) 수립 *①첨단기술과 협력기반 연안안전 공간 조성 ② 국민·지역과 함께하는 연안안전 관리 ③ DEI와 Trend를 반영한 연안안전문화 확산 ④ 연안 안전 제도 개선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26년 1월 중 시행
111		'26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시행계획	계획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 ('23~'27) 추진을 위한 4차('26년) 시행계획(5대 추진 전략*, 11개 세부 과제) 수립 *①도입목표 수립 및 적기 확보 ② 장비관리 및 보급체계 개선 ③ 성능개선 및 기술혁신 ④ 인력 양성 및 조직개편 ⑤ 시설 확충 및 교류협력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26년 1월 중 시행
112		「해양경찰 경비규칙」	훈령	•비공개 행정규칙(3급 비밀)	수정 의결	경비작전과	26년 1월 중 시행